

대수도론을 경계한다.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최근 수도권 시·도지사 당선자들이 대수도론을 주장하고 수도권협의회구성에 나서자,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비수도권 총 연대' 구성을 추진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에 갈등과 대결이 증폭되고 있다. 대수도론은 명분상 지역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도시의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 대도시권의 문제는 한 지역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행정구역의 분리로 생활 현안에 대한 시책과 사업마저 지역간 이해의 대립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온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문제를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통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수도론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비수도권 지역의 극심한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대수도론은 지역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간 상생과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이미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수도권의 발전만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면적에 48%에 해당하는 인구나 60%에 가까운 생산기능, 80%를 상회하는 경제, 사회, 문화의 중추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은 자생적 발전기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여건속에서 수도권만의 성장을 강조하는 경우 국토의 불균형 구조가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둘째, 대수도론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쇠퇴와 자생적 발전기반의 위축을 초래한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대수도론으로 촉발된 수도권규제 철폐에 대한 논란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잃게 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이나 지방에 입주한 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예하도록 한다. 지방 경제의 쇠퇴화와 경쟁력 상실은 지역의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추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킨다. 수도권이 거대한 경제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끊임없이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끝으로 대수도론은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의 지속적 성장마저 어렵게 한다. 수도권에는 지금도 난개발로 인한 과밀·혼잡이 계속되고 있다. 토지이용과 개발에 대한 계획적 통제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가 일방적으로 철폐되면 투자의 확대와 생산 활동이 증대되어 양적 성장은 촉진될 것이다. 현재의 난개발 여건을 방치한 채 양적 성장을 추구하면 과밀·혼잡의 피해는 견딜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수도권의 과밀·혼잡비용은 연간 12조원 정도에 달하고 환경개선비용도 연간 4조원으로 계속 증대되고, 부동산 가격 양등으로 고비용저생산의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특히 도시와 환경수준이 낮아 수도권은 서구의 도시뿐만 아니라 동경, 싱가포르 및 홍콩 등 동북아 국제도시와도 경쟁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수도론으로 촉발된 국론분열과 지역 갈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결과해지의 입장에서 대수도론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수도권의 과제는 분명하다. 난개발을 동반한 양적 성장구도에서 벗어나 도시기능과 삶의 질적 기반을 혁신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대수도론은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수도권의 발전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 근시안적 대응임을 되도록 빨리 깨달았으면 한다.